



◎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◎ 산업자원부

기획예산처

모두가 잘 살기 위한 첫 걸음
국가균형발전특별법

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

국가균형발전특별법, 온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

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실현되었지만,
지역간,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
정신적·경제적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이 현실입니다.

세계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
진정 부강한 나라는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.

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를 간직한 지역,
함께 잘 사는 방법을 나누며 커가는 지방,
특성있는 지방을 지원하는 중앙.

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한다면
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.

국가균형발전특별법!

전국의 균형발전, 나아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 줄
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해답입니다.



찾아보기 <<<



I.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: 수도권 집중 심화	4
II.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	6
1.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	6
2.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	7
3.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	8
III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	10
1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	10
2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	11
IV.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	12
1.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	12
2.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	13
가. 낙후지역개발 촉진	13
나. 지역혁신역량 강화	14
다. 지역특화발전 추진	15
라.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	16
마.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	17
3.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	18
4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	19
V.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하여	20

II

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

수도권 집중 심화

■ 수도권 집중의 현주소

-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.8%('00년 기준)이나, 인구는 46.3%, 중앙정부 부처는 100%, 기타 공공기관은 79%('01년 기준), 30대 대기업 본사는 88.5%('00년 기준), 10대 명문대학은 80%, 제조업체는 57%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총량 경제력의 52.6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


-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.3 : 53.7, 은행예금 및 대출은 70.4 : 29.6,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70.9 : 29.1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(% , '00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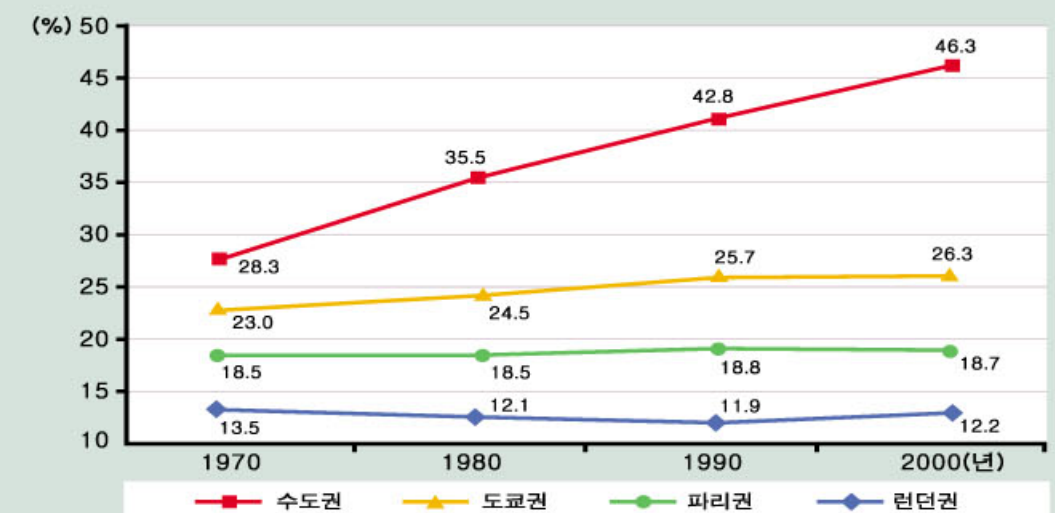


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

- 제조업·금융·서비스 산업의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재정, 사회 기반 및 문화적 시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, 대도시 지가상승, 교통혼잡, 주택부족, 공해발생, 지방대학의 약화,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※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며,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평균 주택 보급률은 100%를 넘어섰지만, 수도권은 92%, 서울은 82%에 불과합니다. 또한,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은 4.7조원('00년 기준)에 달하는 실정입니다.
- 지역 갈등 심화와 지역주의 대두로 국민분열이 초래되고 있고 사회·경제적인 박탈감이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 국가적 동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
- 중앙이 통제하는 지방화, 중앙의존적인 지방의 행태가 고착되어 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발전을 지연시켜 국가의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.

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 비교

- 외국의 경우, 주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, 중앙 집권형 국가 중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추진단(DATAR)을 설치·운영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힘입어 2000년 현재 파리권의 인구비중이 약 18%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

[Ⅲ]

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

1.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

■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.

- 지방 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집중 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했고, 균형발전 정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·분산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, 체계적인 법·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동했기 때문입니다.

	주요시책 내용	평 가
'62 ~ '79 (3·4공화국)	•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('64) • 그린벨트 지정	•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
'80 ~ '87 (5공화국)	•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('82) •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·인천까지 확대	• 수도권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• '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
'88 ~ '92 (6공화국)	• 지역균형개발 기화단 설치 ('89) •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	•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
'93 ~ '97 (문민정부)	•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• 개발촉진지구 도입 ('94) • 준농림지 개발 허용	•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초래 •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공장·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
'98 ~ '02 (국민의 정부)	•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• 그린벨트 규제 완화	•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

2.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

■ 총량성장에서 질적 균형성장으로 전환

- 총량적 경제규모 위주 성장에서 삶의 질, 문화, 환경 등 생활의 제반여건을 두루 고려하는,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.

■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

- 지방 스스로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적 발전체제로 전환합니다.

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진

-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관리에서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의 계획적·과학적 관리의 병행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합니다.

■ 지방의 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책 추진

- 대학, 연구소, 기업,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,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대 육성, 지역특화발전 추진, 지역전략산업 선정 계획 등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■ 종합적 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

- 특별법 제정·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과 재원을 총괄 조정하는 종합적·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합니다.





[Ⅲ]

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

1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

-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획기적인 지방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.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앙 지방 간의 균열과 갈등만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-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선택이 필요합니다. 프랑스는 강력한 추진체계와 관련 예산의 통합지원으로 균형발전에 성공했습니다.
-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중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합니다.
- 참여정부는 특별법 및 특별회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을 상승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합니다.

2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



[IV]

2.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

국무회의

나. 지역혁신역량 강화

■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

- 지역혁신체계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·기업·연구소·지방자치단체·비영리단체의 활동을

다. 지역특화발전 추진

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

- 제조업·문화·관광·물류·에너지 등 저·중·고 소득 대상을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

라.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

■ 과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

-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전국의 79%('01년 기준)로, 이는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의 선도역할을 하도록 합니다.

■ 지방이전 기본방향

- 新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며, 각 기관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.

■ 세부 추진방안

- 원칙적으로 기능별 유사기관을 집단 이전하되, 대규모 기관은 개별 이전을 허용해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유도할 것입니다.
- 이전 대상 기관과 해당 지자체 간에 상호협상 및 이전협약을 체결토록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마.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

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(Win-Win) 도모

- 적극적인 지방자립기반 강화정책을 추진하고,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.
- 수도권은 양적(Quantity)성장에서 벗어나 혁신과 효율을 통한 질적(Quality)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■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차적 연동화 전략

-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·적정화, 규제개혁, 과학적 도시관리, 경쟁력 증진 등 관련 정책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3.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



4.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

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

- 보조금 등 지방 이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방의 기획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,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합니다.



© 2015

클릭하면 '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'가 열립니다

■ 홈페이지 주소 : www.pcbnd.go.kr

※ 홈페이지 주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영문명칭의 약어입니다.

■ 홈페이지 주요 내용

주요 메뉴	세부 항목
위원회 소개	인사말, 위원회 연혁, 위원회 위원 소개, 위원회 활동, 구성 및 운영, 기구표, 찾아오시는 길
정책소개	의제 도출 배경, 현황과 필요성, 비전과 전략
전문위원회	전문위원 소개, 지역혁신 전문위원회, 전략산업 전문위원회, 제도개선전문위원회, 수도권관리 전문위원회
참여마당	FAQ, Q&A, 토론평, 나도 한마디(자유게시판)
알림터	공지사항, 새소식, 보도자료, 언론보도/해명, 균형발전동향, 일정
자료실	정책자료실, 사진자료실, 동영상자료실, 설문조사, 뉴스레터, 신문스크랩
지역혁신 네트워크	시·도별 유관기관 링크

■ 지역혁신 네트워크

- '지역혁신 네트워크'는 유관기관 검색이 편리하도록 전국 지도를 중심으로 각 기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링크해 놓은 것입니다. 초기화면에는 중앙단위 4개 유관 검색시스템과 5개 연구회, 각 지역 소재 유관기관이 전국지도를 중심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.
- 현재 '지역혁신 네트워크'에는 지방자치단체, 대학교, 지역기술혁신센터, 창업 보육센터, 테크노파크, 연구원 등 총 270여개 기관의 홈페이지가 지역별로 분류, 연결돼 있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민단체, 권관운동본부 등의 홈페이지와 연결할 계획입니다.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통편

주 소 | (우)110-760
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-6번지 정부종합청사 6층

지하철 | 3호선 경복궁역, 5호선 광화문역

버 스 | 세종문화회관 앞 : 8, 8-1, 20, 23, 38, 53, 83, 83-1, 89, 135, 135-1, 135-2, 136, 142, 153, 156, 1005, 1005-1(좌), 45-2(좌), 601(공항버스), 1005-3(좌), 1007(좌)
교보문고 앞 : 6, 8, 32, 59, 89, 135, 135-3, 147, 150, 158, 428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찾아오시는 길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화번호

직통전화	02) 3210-4803~5	구내전화	02) 3703-2685~90
지역혁신팀, 전략산업팀	02) 3703-2685~86	기획팀, 홍보팀, 제도개선팀	02) 3703-2688~90
대외협력팀	02) 3703-2687	수도권관리팀, 정책연구팀	02) 3703-2697~98
FAX	02) 3703-2694		